『제언』 우리사회의 기술인에 대한 대우

Treatment for Professional Engineers in our society

글 | 金泳泰
(kim, young tae)

前 철도청서기관
코레일전기(주) 대표이사
現신우이엔지(주)상임고문
철도신호기술사

e-mail: yt3475@naver.com

작년 우리나라의 수출순위는 2008년 세계 12위에서 9위로 뛰어올랐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탑 10그룹에 들어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높은 파도를 헤치고 한국 수출은 작년 한 해 여러 부문에서 역사를 새로 썼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량과 인터넷 사용률, 그리고 IT산업과 핸드폰 보급률은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전쟁 후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에서 불과 반세기만에 이처럼 눈부신 경제발전을 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1960년대 이후 배고프던 시절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계에 뛰어들어 산업기술을 이끌어 온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믿고 있다.

참으로 우리 기술인들은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말없이 국민소득을 2만 달러로 끌어 올리고 번영된 우리나라를 건설하는데 주춧돌이자 대들보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첨단 기술수준은 아직도 일본과는 많은 격차가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에도 추월당하고 있다. 세계 경제력 10위권인 우리에게 '과학기술강국'의 길은 아직도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

20여년 전 우리집안에 '기술고시 합격생'이 나왔지만 주변의 반응은 별로였다.

남에게 힘이 미칠만한 사법이나 행정고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권력지향적인 사고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여성가족부는 존치하면서도 과학기술처는 교육부와 통합해 버렸다. 여성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로서 중요한 국가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한 발상과 너무나 상반된다.

우리 행정부의 장관급이상 30여명 중에 기술인 출신은 한명도 없을 정도이다. 이웃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청와대 기계공학과, 우방궈 전인대위원장이 같은 대학 무선전자학과, 원자바오 총리가 북경대 광산학과를 비롯하여 정치국원 25명 대부분이 이공계출신이다.

또 299명인 우리 국회의원 중에도 기술인 출신은 손으로 꼽아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관리 부서의 기술직은 대부분 하위직으로 그나마 몇 안되고 행정직 일색이다. 이것은 기술인의 정책참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모순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과제인 기술정책의 부재(不在)로 이어 질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기술인들은 역할에 비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은 취업에서부터 정년까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기술계보다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쪽의 전문직이 직업의 안정성이나 사회적인 대우 그리고 출세길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공계에도 '기술사'라는 국가시험자격이 있으나 의사나 변호사처럼 배타적으로 고유의 직무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이유로 너나할 것 없이 사법고시준비와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려는 현상은 갈길이 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장래로 볼 때 참으로 걱정스럽다.

산업사회의 경쟁력은 질 좋은 노동력과 풍부한 부존자원에 달려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노동력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강국'은 우리의 비전이자 살길이다. 그 중심에 기술인들이 있는 만큼 그들을 파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그래야만 우수한 인재들이 기술계로 진출하게 되고, 이것은 곧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원고접수일 2010년 8월 31일〉